

“스파링 학폭”에 아들인생 망가져” 청원

“20만명 훌쩍 넘어서 청와대 답변 요건 충족”

“영종도 맘카페서 주민들 자발적 모금운동”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휘두른 고등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답변 충족요건인 20만여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5일 공개된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16일 오전 11시 현재 22만4500명을 넘어섰다.

공개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인친의 피해 고교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 A(16)군이 ‘저희 아들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다’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이란걸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

처럼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여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을 만드는 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B(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했다.

B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청원인 아들인 A(16)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번갈



아 가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인천 영종도의 한 맘카페에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고등학생 A군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에 나섰다.

해당 카페에는 현재 “아들아! 어서 일어나라!”, “작은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입금했습니다”, “참여합니다”, “동참합니다”라는 주민들의 모금이 잇따르고 있다.

맘카페 측은 31일까지 카페 명의 계좌에 모인 금액을 내역을 모두 공개한 뒤 피해자인 A군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조사·특별 단속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언거거래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또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의 경우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외 불안이 가중됐다.

내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전담반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조사를 비롯해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차량서 여성 강제추행, 전남경찰 간부 검찰 송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무안군 무안읍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 지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지난 2일 오전 1시부터 2시 사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직위해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유전자(DNA)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대포통장 유통·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13명 검찰 송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폭력조직원 13명 등 29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카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광주 지역 조폭 A(39)씨 등 29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폭 B씨 등 전남 지역 폭력조직 3곳 소속 조직원 12명과 계좌 명의를 빌려준 15명 등 27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카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 80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전남 조폭 12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계좌 수십 여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계좌 94개를 만들어 A씨에게 제공, 사용자 명목으로 계좌 1개당 매월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특정인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사들여 해외에 서버를 둔 카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도박의 승률을 조작해 회원들이 돈을 잃게 만들었고, 불법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조폭들은 생활이 어려워 이들에게 접근, 금전적 대가를 주고 이들의 명의를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폭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대포통장 거래와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순천청암대학이사회 서형원 총장, 직무정지 파장 예상

교수노조·교수협의회 “징계 절차 위법...의결 효력 무효” 주장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16일 이사회를 열어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청암학원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가 회의 도중에 갑자기 의장 역할을 맡아 기습적으로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 등이다.

하지만 징계사유나 절차면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의결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청암학원측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지난 번 이사회 의결을 추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 등 교직원들은 “법인 이사장측의 무리하고 갑작스런 총장 직무배제 추

진에 당혹감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암대학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는 15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대학 인증효력정지’가 교직원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오는 19일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인증취소까지도 자초될 사건이 이사회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수노조 등은 “지난 이사회 의결 직무정지 의결은 실제적 징계사유를 논외로 치더라도 절차 면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드러나 의결 효력은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안건 8개 중 7개는 강행된 이사장이 주재해 심의·의결한 후 마지막 안건 ‘의안8. 징계에 관한 건’은 김도영 이사가 이사

장 직무대행으로 기습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정광산 이사장이 권위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이사장과 이사가 서로 자리를 바꾼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등은 또 “징계를 하면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총장 직무정지 의결이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6일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정지 의결이 강행되면 오는 12월19일 인증효력정지가 해제될 시점을 전후로 아예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인증이 취소되면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너무나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순천YMCA 등 42개 순천시



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암학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이사 자격으로 문제가 있는 3명을 승인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 “강명운 전 총장과 관련이 있는 이사 후보들을 승인한 교육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 전 총장 측근들의 독선적인 행위가 이어져 학교와 법인을 파행시킬까 심히 우려 된다”면서 “법인 이사회와 재단 이사장측의 불법부당한 조치가 재발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